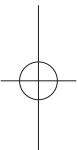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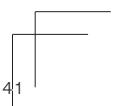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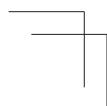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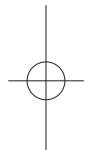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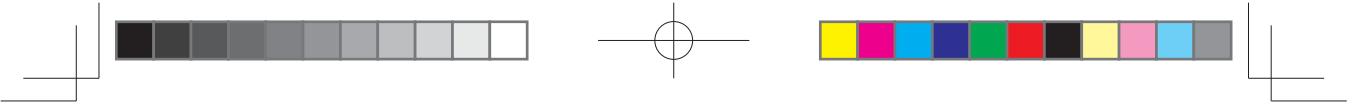


## 머리말



이 책은 2010년 ‘네트워크 세계정치’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후 학문 후속세대 양성의 차원에서 벌여온 대학원생들과의 연구 네트워킹 작업 중의 하나이다. 꾸준히 작업을 이어온 덕에 벌써 세 번째 작품집을 내게 되었다. 첫 번째인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환』(한울, 2011)과 두 번째인 『정보세계정치의 이해: 역사와 쟁점 및 전략의 탄생』(한울, 2013)에 이어서 『네트워크 시대의 외교안보: 중견국의 시각』이라는 제목을 달고 세 번째 작품집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전의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작품집에 실린 논문들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세미나를 통해서 생각과 글을 가다듬었다. 2013년 1학기에는 ‘탈근대세계정치연구: 21세기 국제정치이론의 변화론’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동년 2학기에는 ‘정보세계정치연구: 네트워크 시대의 외교안보’ 세미나를 진행했다. 두 세미나에서 학기말 논문으로 제출된 작업을 토대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추가로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벌인 집중세미나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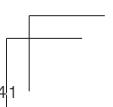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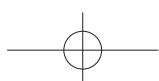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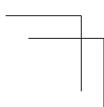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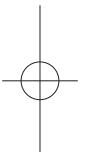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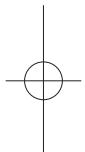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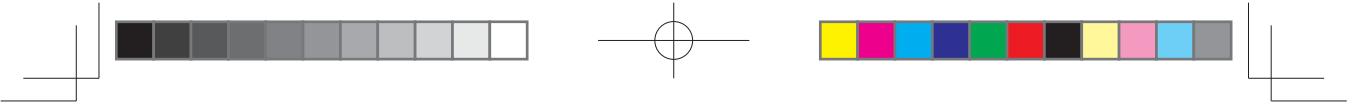


해서 학계에 소개할 만한 수준에 이른 논문 10편을 추렸다. 아직 공부 중인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의 ‘미완성’ 작품이지만 학계에 던지는 화두로서의 참신성을 끌 것으로 생각된다.

네트워크 시대 외교안보의 세계정치를 다룬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네트워크 시각에서 보는 중견국 외교의 사례를 다루었고, 제2부는 네트워크 시각에서 보는 동아시아의 외교안보, 특히 인간안보와 문화외교의 문제를 다루었다. 제1장 “중견국 외교안보 전략의 이론”은 이 책에 실린 10편의 논문이 딛고 선 중견국 외교의 문제의식과 그 위상을 이론적 시각에서 짚어보았다. 기존의 중견국 외교에 대한 이론은 주로 개별 국가의 속성이나 능력 또는 행태에 주목하여 중견국의 일반화된 역할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제1장은 네트워크 시각에서 중견국 외교의 개념과 이론을 탐구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도 중견국의 개념은 어느 국가가 지닌 행위자로서의 속성뿐만 아니라 그 국가가 놓여 있는 세계정치의 구조적 환경과 그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 즉 ‘구조적 위치’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위치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중견국의 후보군을 추려내는 차원을 넘어서 그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펼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구조적 위치의 시각에서 본 중견국 외교의 논의는 협소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개도국의 문제의식을 넘어서 좀 더 개방적이고 관계적인 맥락에서 추구되는 열린 국가이익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1장은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한국 외교의 전략적 방향을 네트워크 이론에서 제시하는 4단계 네트워킹 전략의 잣대에 비추어 제시하였다.

제1부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에서는 네트워크 시각에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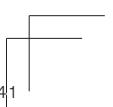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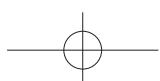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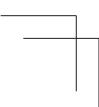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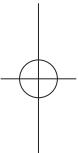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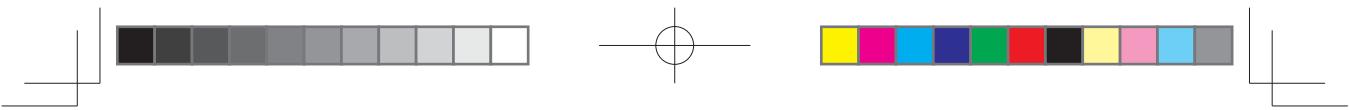


존의 중견국으로 거론되는 국가들의 외교전략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주목한 것은 북유럽의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사례, 중남미의 브라질과 멕시코의 사례, 그리고 북극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북극이사회 국가들의 사례 등이다.

제2장 '스웨덴의 규범외교와 중견국 외교전략'은 중견국으로서 스웨덴의 규범외교가 형성된 1960~70년대의 구조적 맥락에 대한 분석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스웨덴은 개발원조, 분쟁중개, 평화유지, 환경, 인권, 젠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인도주의적, 국제주의적인 정책을 실천해왔고, 이를 통해 국가적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규범적인 외교행태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후반 올로프 팔메가 총리로 취임하고 난 이후이며, 당시 사민당 정책결정자들은 '세계의 양심'으로서 동서구 도와 남북구도 속에 균형을 잡고 세계평화를 증진하겠다는 적극적인 규범외교를 수행하였다. 이전까지 스웨덴의 규범외교는 사민주의 체제 및 문화라는 국가 내적 속성을 강조하는 시각에 따라 미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럽 변방의 상대적 소국으로 제한적인 역량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스웨덴의 지정학적 위치와 위협 수준을 감안한 사민당 정부의 전략적 선택으로 나타난 것이다. 당시 스웨덴은 세계(거시적 냉전 구도)-지역(유럽)-소지역(북유럽) 차원에서 제한적인 자국의 위치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자율성 확보와 위상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중하게 규범외교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장은 스웨덴의 자애롭고 규범적인 외교행태가 기준의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국익이라는 실리에 기반을 둔 전략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스웨덴의 규범외교 전략은 궁극적으로 물질적 자원이 제한적인 중견국들이 추구할 외교의 일반모델로서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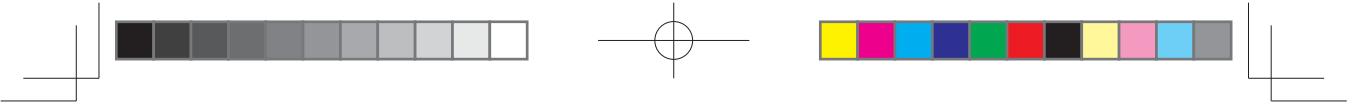
제3장 '노르웨이의 중견국 외교와 NGO의 역할: 집속탄금지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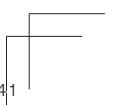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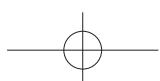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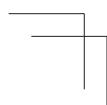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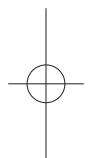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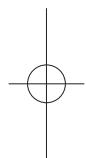
의 사례’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 국가와 구조적 공백 및 번역의 과정이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중견국으로서 노르웨이와 NGO가 집속탄금지협약의 체결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제3장이 주목한 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21세기 세계 정치 변화의 조짐이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강대국의 독점무대로 인식되었던 군축 협상에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같은 중견국들의 외교적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중견국들은 비국가 행위자인 NGO들과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특징이 있다. 2008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체결된 집속탄금지협약(Cluster Munition Convention, CMC)은 중견국 노르웨이와 NGO 파트너십이 강대국의 반대를 극복하고 결실을 맺은 사례로 주목받았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집속탄의 군사적 효율성을 위주로 논리를 펼쳤지만, 노르웨이와 NGO는 규범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비인도적 무기’라는 시각에서 집속탄 금지 담론을 형성했다. 제3장은 행위자-구조-과정의 복합적인 시각을 원용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결여했던 부분, 특히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최근 중견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한국 정부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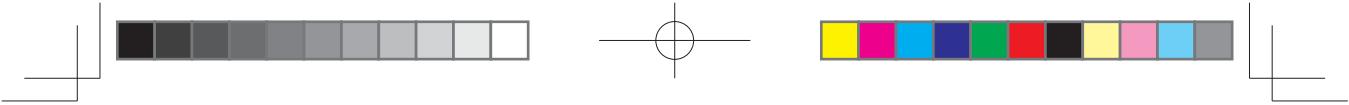
제4장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와 브라질의 에이즈 전략’은 중견국 외교의 시각에서 브라질의 에이즈 전략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편으로 지적재산권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 무역레짐에의 참여와 다른 한편으로 국내 에이즈 정책 및 의약품 접근권 보호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펼친 브라질의 네트워크 전략에 주목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세계의 에이즈 피해 양상이 아프리카나 남미와 같은 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브라질의 에이즈 프로그램은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ARV) 약물 치료 제공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면서 다른 개도국들을 위한 참고 모델로 떠올랐다. 기존에는 브라질의 고유한 물질적 자원이나 사회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 에이즈 정책을 설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 것과 달리 제4장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내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가 국내 및 국제 보건 안보 증진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논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초반 브라질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는 TRIPS 협정의 발효로 인한 에이즈 약물의 가격 상승을 둘러싸고 나타난 국제사회의 대립 구도 속에서 중개자로 등장하였다. 그 구체적인 전략은 선진국과 대형 제약회사들이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 가담하는 동시에 이들을 상대로 강제실시권 발동 위협 및 협상을 통해 가격 인하를 이끌어내고 개도국을 대표하여 개발, 인권, 안보 프레임워크 내에서 필수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제4장은 그러한 과정을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의 ‘번역’의 과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보건과 같은 안보 문제가 탈근대 세계정치의 어젠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브라질의 에이즈 사례는 개도국이 비(非)전통 안보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틈새전략과 이를 통해 어떻게 대외적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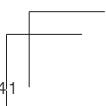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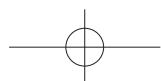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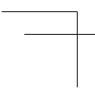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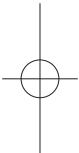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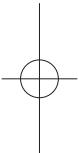
제5장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비핵지대 조약과 멕시코의 중개 외교’는 인간 거주 지역에 형성된 최초의 비핵지대 조약인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비핵지대 조약의 성립 과정에서 나타난 멕시코의 외교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현재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33개국)과 라틴아메리카에 속령을 가진 역외 국가들, 핵 보유국들은 라틴아메리카 비핵지대 조약과 부속 의정서에 서명 및 비준을 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높은 참여율은 조약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였다. 하지만 그 과정은 길고 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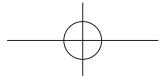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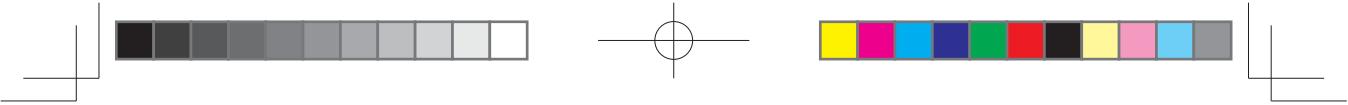




난했다. 조약의 협상 테이블은 다양한 행위자들과 이런 행위자들이 관계를 구성 또는 해체하는 역동적인 네트워킹 무대였다. 특정 이슈를 두고 이해가 대립하며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전략적 이익이 비슷한 행위자들끼리의 관계는 강화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는 네트워크 구조를 ‘정확하게’ 읽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협상 초기부터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비핵지대 조약은 가장 성공적인 비핵화 레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조약이 달성한 성과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들은 설명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역내 강대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아닌 중견국 멕시코가 어떻게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의 구조적 맥락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5장은 라틴아메리카 비핵지대 조약의 수립 과정과 멕시코의 행동양식을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제6장 ‘북극 거버넌스와 북극이사회 국가들의 네트워크 전략’은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시각에서 북극 거버넌스의 문제를 들리싸고 펼쳐지는 북극이사회 국가들의 외교전략을 살펴보았다. 20세기에는 세계 정치와 외교의 관심 밖에 있던 북극이 탈근대에 들어 글로벌 환경 문제의 영향으로 인간 활동 가능 영역으로 변모하면서 상업, 문화, 안보 등 새로운 이슈를 놓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경쟁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6장이 북극에서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행위자들이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벌이는 전략을 살펴보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변화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이다. 전통적 지정학적 논리를 넘어서 탈근대 네트워크적 논리로 해석되는 북극 네트워크에서 연안국, 비연안국, 비북극권 국가 등 세 분류의 국가군이 각기 다른 네트워크 전략을 펼친다. 연안국은 북극이사회 설립자로서 번역 과정을 거쳐 북극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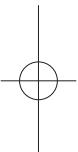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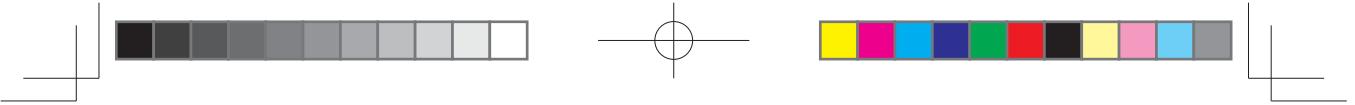


트워크를 선점하였고, 북극이사회의 구성과 권위를 통제하면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는 비연안국들은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사회로 균형이 쏠리지 않게끔 하거나 중개자로서 비북극권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전략을 취한다. 비북극권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북극 이해당사국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북극 네트워크에 편입하고자 노력하여 스스로 자신들의 위치를 일종의 구조적 공백으로서 활용하려는 전략을 추구한다. 제6장은 이러한 중첩적 네트워크 게임의 동학을 살펴봄으로써 망제정치의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북극에서의 게임의 규칙은 네트워크가 될 것임을 전망하였다.

제2부 ‘동아시아 인간안보와 문화외교’에서는 비전통 안보(특히 인간안보)의 분야에서 주목받는 동아시아의 난민 문제와 보건의료 안보 문제를 탈북자와 사스 위기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전략과 문화외교의 사례로서 싱가포르의 외교전략과 문화산업과 사이버 공간의 민족주의에서 나타나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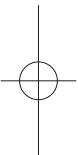
제7장 ‘동아시아 난민 거버넌스와 탈북자 문제: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은 동아시아 난민 거버넌스의 독특한 사례로 부상한 탈북자 문제를 이에 개입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서는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북한을 떠나는 탈북자들의 수가 급증했고, 특히 한국행을 염두에 둔 이른바 ‘기획 탈북’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도 커졌다. 그러나 탈북자를 유엔 난민 협약에서 정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에 북중 국경을 건너 중국으로 온 많은 탈북자들은 다시 북한으로 돌려 보내졌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해 탈북 문제에 적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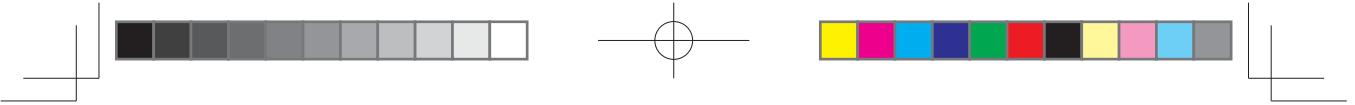




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유럽에서 성공적인 난민 정책을 수립했던 세계난민기구(UNHCR)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제7장은 국가 행위자와 국제기구를 위주로 한 난민 레짐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국가 행위자가 빈틈을 파고들어 탈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동아시아 특유의 난민 거버넌스의 지형적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고, 이를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살펴봤다. 대표적인 비국가 행위자인 선교단체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조선족 교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탈북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또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 북송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지 기반을 마련하며 중국 정부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한편 또 다른 비국가 행위자인 탈북 브로커들은 선교단체의 교회와 같은 기존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점조직 형태의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하면서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갔다. 탈북 브로커들은 한국 정부가 실시한 탈북자 정착 지원제도를 착취해 점차 상업화되었다. 다만 비국가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다보니, 네트워크가 단절되는 경우도 발생해, 탈북자들이 오히려 인권 침해를 당하는 부작용도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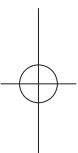
제8장 ‘동아시아 사스 위기와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복원력’은 2003년 동아시아를 휩쓸었던 대표적인 탈근대 안보이슈인 사스(SARS)에 대응하여 주요 감염국들이 보여준 회복역량을 복원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제8장은 극단적 사건(X-event)으로서 사스가 가진 위험의 속성을 고려하여 국가들 간의 내적역량과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외부 변수를 종합해서 살펴보았으며 기존 연구에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던 위기에 대한 학습과 적응이라는 동태적 과정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대응 과정은 상반된 정치환경으로 인해 다른 방식의 위험 관리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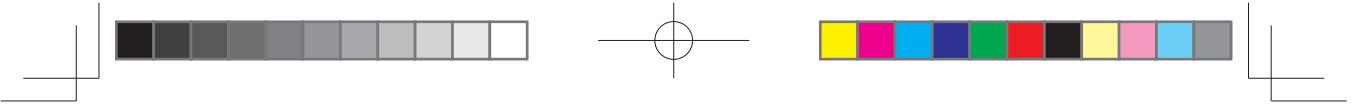




그러나 이들 사례는 복원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역량을 통해 일부는 성공적인 대응모델로 전환하였고 나머지는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즉 이들은 서로 다른 위협통제역량, 위험소통역량, 위험감수역량의 분포를 가지고 선호적인 모델로 사스에 대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상의 세 가지 역량이 골고루 갖추어졌거나 부족한 역량의 부분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를 선택한 싱가포르가 신속한 회복을 보여주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극단적 사건(X-event)과 같은 불확실한 위험 속에서 국가가 얼마나 높은 복원력을 가지느냐의 여부는 탈근대 시대의 새로운 권력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마주한 위험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지식과 이에 부합하는 위험 관리 모델로 이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량이야말로 21세기 네트워크 지식국가가 가진 복원력의 기초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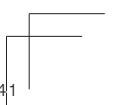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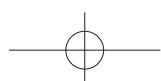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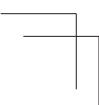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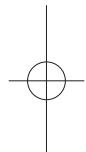
제9장 ‘싱가포르의 예외주의: 아세안 경제외교와 지식문화전략에 주는 함의’는 동남아시아에서 금융이 발달한 경제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문화중심지로 부상한 싱가포르의 국가전략을 살펴보았다. 싱가포르는 2010년 1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의 총 경제 규모를 추월하게 되었고, 뉴욕 등과 함께 세계 5대 금융 도시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문화중심지라는 국가 이미지도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울리게 되었다. 서울보다 약간 큰 정도의 규모인 싱가포르가 어떻게 이런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싱가포르의 발전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는 싱가포르의 경제력에 초점을 맞추는 발전론적 시각에서 행해졌거나, 비경제적 요소들을 단순 집합적으로 수집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싱가포르가 국제무대에서 차지하고 있는 하드파워 이상의 지위를 이해하는 데 반쪽의 이해밖에 주지 못한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이후 일관적으로 더 높은 정치적 계급에 속하려는 ‘상승전략’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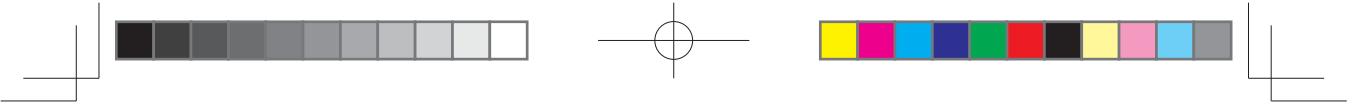




기초하여 때로는 역내 국가들과 뭉치는 힘을 추구함으로써, 때로는 자신만의 상승지향적인 차별성을 강조하는 예외주의적 노선을 통해서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는 물론 지식·문화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가치의 질서 게임에서도 우세할 수 있었다. 제9장은 싱가포르의 외교전략적 특성을 예외주의 전략과 음니보어 전략으로 나누어보고, 이것이 정치·경제적 차원과 지식·문화적 차원에서 어떻게 실제 수행되었으며 효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10장 ‘일본의 인터넷 민족주의: 넷우익의 반한류 활동’은 최근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일본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소위 넷우익의 반한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극단적인 반한·반중 감정을 표출해오던 넷우익이 10여 년 전 등장했으나 현실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그러나 최근 넷우익의 활동 공간 및 관련 주제가 확장되면서 한일 및 중일 관계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제10장은 한국과 관련한 일본 넷우익들의 담론 및 행태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실제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과거 10여 년간 넷우익의 활동이 다양화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이 한국의 어떤 점을 비난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한일 간의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의 문화외교 정책에도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우익의 형성에 있어서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갈등과 일본 사회 내부적 문제라는 근대적인 요인의 영향이 커지만, 그들의 행동방식과 성장의 배경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지구화라는 탈근대적 배경이 존재한다. 한국과 관련해서 넷우익은 역사와 영토문제를 비롯해 한류 콘텐츠 및 정보통신 기술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역사 및 영토 문제보다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정책과 인터넷 공간의 보수화 등에 미치는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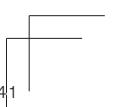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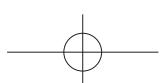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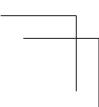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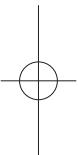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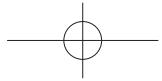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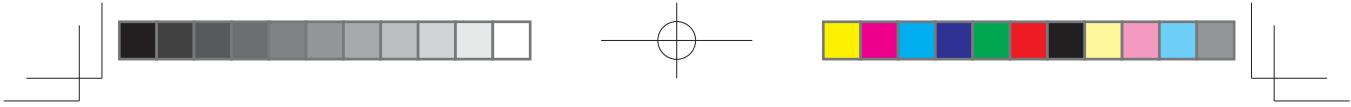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11장 '한류의 구조적 공백과 정부의 역할: 문화산업과 공공외교를 중심으로'는 최근 중견국 한국의 문화외교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한류의 사례를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한류의 전 세계적 인기가 꾸준히 지속되어, 그간 불모지였던 유럽이나 미국에도 유튜브와 SNS를 통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문화산업계는 이러한 추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한류 현상에 정부가 중요한 행위자로 부각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한류의 발전에 있어 정부가 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등 기여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한류 콘텐츠에 대한 지나친 규제, 정부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한류의 인기에 편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한류를 정부의 입맛에 맞게 각색한 정책 등이 눈엣가시와 같이 부각되면서 과연 한류의 발전에 있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회의적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매년 한류의 발전을 위해 3~4천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조성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는 만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부 스스로도 명확히 규정하여 콘텐츠를 개발하는 산업체와 합의를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제11장은 정부의 한류 관련 예산 사용과 정책을 살펴보고,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해보기 위해 구조적 공백의 개념과 네트워크 지식국가론을 원용하여 정부의 역할을 분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작업은 2010년 소형 연구팀 프로젝트(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정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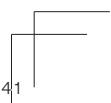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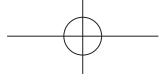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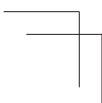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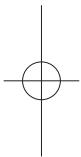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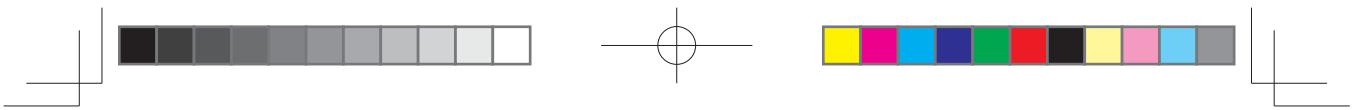


이어 2013년에 중형 연구단 프로젝트(네트워크 국가의 세계정치)로 진입 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ocial Science Korea, SSK) 을 계기로 하여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이 책의 모태가 된 대학원생 세미 나와 병행하여 진행된 ‘중견국의 공공외교’ 세미나와 ‘중견국외교연구 회’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의 말씀을 주신 손열 교수, 배영자 교수, 이승주 교수, 그리고 이현미 박사, 장혜영 박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작업을 위한 방학 집중 세미나에 참여하여 유익한 토론을 해준, 김병구, 박상연, 서지희, 송태은, 양경진, 양종민, 옥창준, 용채영, 유성, 이원경, 정은희, 진의림, 최인호, 타일러 등에 대한 고마움도 잊을 수 없다. 이 책의 마무리 과정에서 번거로운 일들을 사양하지 않고 도와 준 최은실, 곽민경 씨의 노력도 고맙다. 끝으로 새롭게 벌이는 지적 시도 의 취지를 알아주시고 흔쾌히 출판을 맡아 주신 도서출판 사회평론의 관계자들께도 감사한다.

2014년 5월 14일

김상배





## 차례

머리말 5

제1장 중견국 외교안보 전략의 이론 김상배 21

- I. 머리말 22
- II. 중견국의 구조적 위치론 28
- III. 중견국의 열린 국가이론 38
- IV. 중견국의 네트워크 전략론 48
- V. 맷음말 56

## 제1부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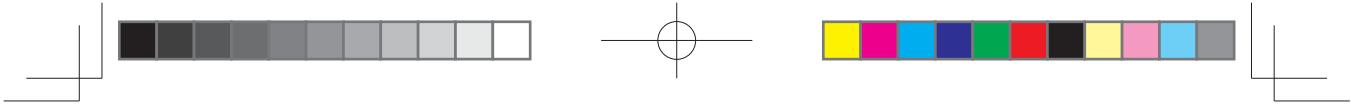
제2장 스웨덴 규범외교와 중견국 외교전략 최은실 66

- I. 서론 67
- II. 사민당 외교노선의 전환과 규범외교전략의 탄생 73
- III. 세계적 차원의 미-소 대립 구조: 약소국 정체성 80
- IV. 유럽 공동체 출현과 국가브랜드 차별화 전략: 국제주의와 연대주의 84
- V. 규범적 정체성과 북유럽 지역구조의 협력 메커니즘 89
- VI. 결론 94

제3장 노르웨이의 중견국 외교와 NGO의 역할: 집속탄금지협약의 사례

조채은 102

- I. 서론 103
- II. 중견국 노르웨이의 위치 짓기 108
- III. '네트워크 국가' 노르웨이 118
- IV. 집속탄금지협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노르웨이와 NGO의 외교전략 124
- V. 결론 134



제4장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와 브라질의 에이즈 전략 황예은 142

- I. 서론 143
  - II. 에이즈와 글로벌 거버넌스 148
  - III. 브라질 에이즈 정책의 변천과 특징 153
  - IV. 네트워크 전략으로 보는 브라질의 에이즈 및 의약품 접근권 정책 159
  - V. 결론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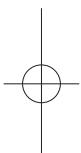
## 제5장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비핵지대 조약과 멕시코의 중개외교

김주연 174

- I. 머리말 175
  - II. 라틴아메리카 비핵지대화 네트워크 구조 180
  - III. 멕시코 중개외교의 배경과 대내적·대외적 요인 184
  - IV. 멕시코의 중개외교 192
  - V. 맨으만 204

제6장 불글 거버넌스와 불글이사회 국가들의 네트워크 전략 안홍은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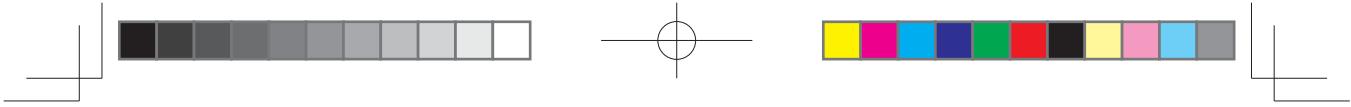
- I. 서론 211
  - II. 북극 네트워크와 북극 이사회 217
  - III. 북극 연안국들의 네트워크 전략과 북극이사회 221
  - IV. 북극 비연안국들의 대항 네트워크 전략 230
  - V. 비북극권 국가들의 네트워크 편입 전략 236
  - VI. 결론 244



## 제2부 동아시아 일간악보와 문화외교

제7장 동아시아·남미 거버넌스와 탈북자 문제: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 252

- I. 서론 253
  - II. 1980~2000년대 기획 탈북의 흐름 257
  - III.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 262
  - IV. 선교단체의 탈북자 지원과 경로 개발 269
  - V. 탈북 브로커의 상업화와 전략 278
  - VI. 결론 287



제8장 동아시아 사스 위기와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복원력 윤정현 293

I. 머리말 294

II. 위험과 복원력의 이론적 분석틀 299

III.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사스 대응 과정과 복원력 유형 308

IV. 결론: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복원력 325

제9장 싱가포르의 예외주의: 아세안 경제외교와 지식문화전략에 주는 함의

강다워 330

I. 들어가며 331

II. 구별짓기와 옴니보어의 분석틀 335

III. 싱가포르의 예외주의적 인식 338

IV. 정치경제 측면에서 나타난 예외주의와 연대주의의 복합 전략 346

V. 경제 중심지에서 문화 중심지로의 도약 351

VI. 마치며 356

제10장 일본의 인터넷 민족주의: 넷우익의 반한류 활동 이원경 361

I. 들어가며 362

II. 기존 논의 분석 365

III. 일본 넷우익의 형성 및 전개 369

IV. 넷우익 활동의 과정과 한국에의 함의: 근대와 탈근대의 관점에서 383

V. 나오며: 한국 문화외교에 주는 교훈 395

제11장 한류의 구조적 공백과 정부의 역할: 문화산업과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곽민경 403

I. 문제제기 404

II. 한류의 구조적 공백 409

III. 문화산업 분야의 정부 역할 416

IV. 공공외교에서의 정부 역할 426

V. 결론 437

찾아보기 444

